

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Effect of the Perception of Social Inequality on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Fairness

: Focusing on the Regional Difference

김 상 숙*·나 보 리**

Sangsuk Kim·Bori Na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
- V. 함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민들의 사회적 배경(소득·학력·성별)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센터의 2019년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학력불평등, 성별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 및 성별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 사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정부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공정성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 제1저자,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연구원

논문 접수일: 2022. 8. 12. 심사기간: 2022. 8. 12. ~ 2022. 11. 9. 게재확정일: 2022. 11. 9.

□ 주제어: 사회적 불평등 인식, 정부공정성 인식, 수도권-비수도권

The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equality perception and the government fairness perception, depending on residents in capital and non-capital area. The study illustrates the possibilities that residential regions might lead to differences in inequality perceptions on income, education, gender, and fairness perceptions on government. Using survey data on people's perception of government's role in 2019, the study perform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note higher perception of inequality in income, education, and gender builds a lower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being fair. Also, it is more likely that residential regions have moderate perceptions of income and gender inequality and government fairness. Capital and non-capital area show differ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hese regional distinctions would produce a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social inequality and government fairness. The study results imply that understanding the regional and personal perception of unequal allocation of public policy is necessary to enhance the government fairness level.

□ Keywords: Social Inequality, Government Fairness, Capital and Non-Capital Area

I. 서론

국가주도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달성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중산층 붕괴,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불평등이 급격히 고조되었다(이건, 2015). 코로나19 이후 소득, 성별, 계층 등에 있어 불평등에 따른 갈등이 한층 더 높아진 가운데 최근에는 '수저계급론'이나 '서울공화국' 등의 용어에서 표현되는 부의 대물림, 불균형적 지역발전 등에 대한 불공정 문제도 커지고 있다(박진아, 2020). 이에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대적 화두이자 핵심 정치 아젠다가 되었다.

정부공정성 인식은 국민이 정부활동에 대해 공정한 것으로 지각하는 결과(Hegvedt, 1993)로,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와 정부정책 결정과정을 공정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박현주, 2016). 이러한 인식은 사회의 질서, 통합, 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 제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박효민·김석호, 2015). 다만, 정부공정성 인식은 개인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주관적이며 개인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지점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공정성 인식에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 사회적 맥락 등 상황적 배경의 요인이 작용하며(박효민·김석호, 2015),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된 절차와 분배의 불공정함은 사회적 갈등이나 충돌로 나타날 수 있다(이중수, 2011). 때문에, 무엇을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동안 행정학에서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차원의 논의 및 공정성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공조직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예, 김호균, 2007; 박철민·김대원, 2003; 배귀희, 2007; 김호균·김정인, 2013; 최낙범·엄석진, 2013 등). 한편, 사회적 차원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정성과 사회갈등간의 관계(이건, 2015)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왔다(예, 박종민·배정현, 2011; 이지호·이현우, 2015; 신상준·이숙중, 2016; 서정욱 외, 2021 등).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민주적 지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강우진, 2017), 정책결과 자체보다는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정부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이지호·이현우, 2015). 정부 공정성 인식은 개인이 놓인 상황과 경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윤민재·임정재, 2022), 특히 개인의 경험을 통해 지각한 불평등인식이 정부정책의 구성, 절차, 분배에 대한 공정성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박현주, 2016).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사회 주요 사회적 불평등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정부공정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의 지각은 정부 활동의 공정성 인식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공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인식 수준이나 사회적 불평등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정부공정성 인식 수준에 주목한 일부 연구들은 정부공정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이나 영향관계는 밝히고 있지 않거나(김명인, 2005; 이종수, 2011), 지역특성을 경제적 지표로 확인되는 소득 수준에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박현주, 2016).

본 연구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공정 혹은 형평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득, 학력, 성별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 지역에 따라 준거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센터의 2019년도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데이터를 통해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함의를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정부공정성

일반적으로 공정성은 공공성이나 형평성과 혼용하거나, 배분적 정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사회 정의 혹은 평등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등 다의적 의미로 적용되고 있다(엄석진·윤영근, 2012). 공정성 인식에는 지위, 감정, 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과 권력과 정당성, 기준점과 준거집단, 사회적 맥락 등의 상황적 배경이 다양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효민·김석호, 2015). 그렇기에 세대, 성별 등 개인의 환경과 경험에 근거한 공정성 인식은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확실성 지각으로 나타나며 공정인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윤민재·임정재, 2022).

공정성 인식과 관련된 논의는 개인에 대한 관점을 넘어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로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이희정, 2018b). 이러한 관점에서는 공정성을 개인 간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 전체의 질서와 선(goodness)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미시공정성(microjustice)과 거시공정성(macrojustice)으로 구분할 수 있다(Brickman et al., 1981; Tyler et al., 1997; 이희정, 2018a에서 재인용).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거시공정성의 개념화를 시도한 Brickman et al.(1981)은 보상에 대한 평가가 개인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와 사회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서로 다른 공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Brickman et al.,

1981). 이 때 사회 전체의 질서와 선에 주목하는 경우, 여러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의에서 특히 가장 영향력을 가지는 주체는 정부로, 국민들은 자신이 받는 수혜나 세금, 경제적·사회적 정책에 대해 분배 혹은 공정성과 연계하여 정부나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한다(Lind & Tyler, 1988).

사회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활동이 공정한 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정부공정성은 국민이 정부 활동에 대해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Hegtvedt, 1993). 즉, 정부공정성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와 정부정책 결정과정이 공정한 것으로 인지하는 결과이다(박현주, 2016). 정부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비용과 편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김세원 외, 2011). 특히 정부공정성은 당시 집권 정부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이를 동의 혹은 지지하는 수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면서 갈등의 여지를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공정에 대한 평가 혹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인식하거나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박진아, 2020) 과거에 비하여 정책의 혜택이 있더라도 타 집단에 비하여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은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종민·배정현, 2011).

그간의 정부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공정성을 주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한 차별적 인식 및 정책결정과정이거나 집행 과정에서의 정부의 태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석현호 외, 2005; 이윤경, 2014; 서정욱 외, 2021). 국민들의 정부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정책내용과 정책결과보다 정책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는 정부에 대한 태도나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박종민·배정현, 2011; Tyler et al., 1985). 또한 정부공정성은 정부신뢰 및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검증되어 왔다(강우진, 2017; 이종수, 2011; 손호중·채원호, 2005; 박종민·배정현, 2011; 이지호·이현우, 2015; 신상준·이숙중, 2016; 윤건·서정욱, 2016 등). 공무원들의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향상은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이지호·이현우, 2015).

최근 정부공정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조직행태 관점으로 조직 수준에서의 공정성 연구가 활발한 것¹⁾에 비해 거시적 차원의 정부 수준에서의 공정성 연구는 부족하고, 특히 정책의 대

1) 조직에서의 공정성은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행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Hegtvedt & Johnson, 2000),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크게 구분하여 주로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위한 개인의 노력에 상응하여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다(Homans, 1961). 사회 구성원들의 보상에 대한 공정성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감정적 애착, 생산성을 높이며, 헌신과 협력의 태도를 가져오는 등 공동체 내에서의 긍정적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Tyler, 2010; 박효민·김석호, 2015에서 재인용).

상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김은희·박희서, 2007; 이윤경, 2014). 정부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윤민재·임정재, 2022). 선행연구에서는 정부공정성 지각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정치이념 등을 검증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정부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낮으며(김명인, 2005), 개인주의, 평등주의, 체념주의와 같은 가치관이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한다(이윤경, 2014). 지역 수준에서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는 정부 공정성에 대한 영향 요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에 대해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보기도 하였다(김이수, 2016). 이러한 개인, 사회, 제도, 환경 요인들은 접근 가능성과 배분 수준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표현되며 불평등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공정성을 거시적 수준에서 국민이 정부 활동에 대해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Hegtvedt, 1993)라고 볼 때, 이러한 정부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비롯하여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위의 상대적 수준, 즉 불평등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은 집단 간, 계층 간, 부문 간 사회적 기회, 자원, 권력이 불공평하게 배분된 상태(조명래, 2011)로, 주로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반영하며 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사회지위의 불평등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나 공정성 원칙 선호는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관점에서 공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 간 상대적인 차별과 소외가 나타난다(이희정, 2018b). 사회적 불평등은 객관적 불평등 수준과 주관적 불평등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관적 불평등 인식이 정책선호에 영향을 주므로 정책연구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우명숙·남은영, 2021).

우리사회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만큼이나 빠르게 소득분배가 악화되었고, 시장소득과 가구소득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주병기, 2022). 소득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뿐 아니라 학벌에 따른 서열화와 폐쇄적인 집단문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에서 지속되어 온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 따른 젠더갈등 등이 우리사회의 주요 불평등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인식의 경험은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의 자원 배분과 그 절차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국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공정한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제공된다면 사회 구성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및 가치체계에 부응하여 정책 집행을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믿음이 커질 수 있을 것(박희봉·이영란, 2012)이라는 예측에서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난다. 정부의 활동은 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며, 동시에 국민들은 사회의 불평등 수준 인지를 통해 정부의 공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논의로 경제불평등과 사회공정성 인식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 때 경제불평등은 소득, 자산격차의 형태로 이해된다(윤민재·임정재, 2022). 이는 불평등을 대체로 소득과 분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입장으로, 계급론적 차이로서 경제적 차원에서의 양적인 차이에 집중한다(신광영, 2004). 능력주의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학력에 따른 불평등 인식 역시 공정성과 연계되어 논의된다. 능력주의에 의한 경쟁결과는 공정한 것으로 수용되지만(이현, 2021), 이 능력주의와 불평등의 관계가 매우 깊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적자본은 경제자본, 사회자본과 함께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정동일·박영민, 2021) 학력불평등 인식은 경제적 차원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 등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불평등과 사회공정성 인식의 경우 마르크스와 베버의 구조적 사회 관계론적 접근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윤민재·임정재, 2022). 성별불평등은 양성평등 이슈와 맞물려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전통이 잔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정책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상이한 평등 관념과 기준으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간의 대립이 심각한 영역이다(박종민·배정현, 2009). 사회에서의 기회 및 분배 구조, 지역발전 등에 정부의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이 경험한 불평등인식은 정부의 활동과 그 활동이 각 집단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불평등은 공정성 가치를 제기하는 기반이기도 하며(조권중·최지원, 2020), 불평등 인식 연구는 계층과 집단 간 갈등을 이해하고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정책 발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윤민재·임정재, 2022).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을 구분해서 서로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정부공정성 인식에 대해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소득, 학력, 성별 불평등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공정성 인식의 영향관계는 부(-)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1-1]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학력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성별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역격차와 정부공정성

과거에는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사회적 갈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면, 현재는 상대적으로 지역색의 완화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구조에 따른 차별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의 집중화 및 광역화 양상, 일부 광역 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전반적으로 위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의 공간적 패턴이 일종의 제로섬(zero-sum)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명래, 2011). 서울과 수도권을 향한 인구, 자원, 경제력의 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를 확대시켜 왔고(박준식·김영범, 201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 간 소득 격차 등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준호, 2009; 김종일, 2010). 수도권은 과밀화에 따른 주택, 교통, 일자리 등의 사회문제 뿐 아니라 지나친 경쟁과 상대적 박탈과 같은 사회문제가, 비수도권은 지역 경제의 침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성장동력 쇠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정준호, 2009; 김종일, 2010; 박준식·김영범, 2012; 서정욱 외, 2021).

지역격차는 국가 전체적인 제도나 정책 등을 통해 산출된 편익의 분배방식 혹은 투입물의 배분방식으로 인해 초래되는 지역불평등 정도로, 국가 정책으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이나 차별을 받는 데 따른 인식은 지역격차의 정도로 표현될 수 있다(소진광, 2020). 이러한 지역격차는 정부 활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일부 연구들은 정부공정성의 지역 간 차이를 발견하였다. 김명연(2005)은 호남지역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공정성 지각이 낮다는 점을 밝혔고, 박현주(2016)의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정부공정성 지각은 소속한 개인의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사회보장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부공정성 지각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 차이 뿐 아니라 지역 간 사회경제적 수준이 개인의 정부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유두호 외(202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공정성은 지방정부의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서정욱 외, 2021).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부터 초래하는 지역격차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혹은

차별의 일부는 국가의 책임일 수 있다는 점에서(소진광, 2020),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정부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적 요인들 역시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Cohen-Charash & Spector, 2001; Colquitt et al., 2005; 김이수, 2016에서 재인용),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수준이나 유형 등의 객관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인지적·정서적인 반응 또한 공정성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거, 산업, 고용, 교육, 삶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의 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사회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사회적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정부공정성 인식에 차별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정부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영향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공정성의 영향관계는 거주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1] 소득불평등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2] 학력불평등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3] 성별불평등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및 변수 구성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센터에서 1:1대면조사(TAPI) 방식으로 수행한 2019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총 유효표본수 6,997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 및 측정은 <표 1>과 같다.

사회구성원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사회구성원의 의식, 태도와

행위 등에 영향을 주고 사회 불평등 구조와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매개한다(Kluegel & Smith, 1981; Kluegel & Matějů, 1995; Veenhoven, 2002; 이희정, 2018b에서 재인용)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 사회적 불평등 인식은 객관적인 불평등 수준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황선재·계봉오, 2018). 공정성의 경우 객관적 공정성 수준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수준을 바탕으로 사회의 공정성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정성의 개념이 상당 부분 동시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이 중요성을 갖는다(김병관,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이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정부공정성은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일문항으로 0부터 10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대표적인 사회적 불평등 지표인 소득불평등, 학력불평등, 성별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정부공정성은 특정 정부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집단에게는 공정성이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다(김세훈·서순복, 2012).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이 있어 혜택을 많이 받거나 과거와 비교해 그 수준이 높아졌더라도 다른 준거집단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박종민·배정현, 2007).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정부공정성 지각의 영향요인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정치이념 등이다(박현주, 2016). 이에 통제변수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등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통제변수에 사회신뢰를 포함하였다. 일반적인 사회신뢰는 정부신뢰와 독립적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개념으로(이창원·조문석, 2016) 신뢰를 통한 대인관계가 활성화되면서 정책 참여 수준이 증진되면 정부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박희봉 외, 2003; 정광호 외, 2011; 김병규·이근수, 2013).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수 있으며(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신뢰와 정부공정성의 관계가 확인된 결과(이윤경, 2014) 등을 고려해, 신뢰의 영향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통제하였다.

한편, 보수 혹은 진보적 이념 성향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금현섭·백승주, 2010; 이윤경, 2014).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 또한 정부업무성과 및 정부효과성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정부신뢰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이다(김상돈, 2009).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정부 정책이나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며(Hetherington & Husser, 2012), 정부에 대한 태도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유승주 외, 2019).

〈표 1〉 변수의 측정

변수	내용		측정
종속변수	정부공정성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공정=0, 매우 공정=10
독립변수	사회적 불평등	소득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 측면에서, 학別に 따른 대우가, 성별 측면에서 매우 불평등하다=0, 매우 평등하다=10 (역코딩)
		학력	
		성별	
조절변수	지역		수도권 거주=1, 비수도권 거주=0
통제변수	연령		청년(19~39세)=1 장년(40~64세)=2 노년(65세 이상)=3
	성별		남=1 여=0
	학력		고졸미만=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이상=4
	정치성향		진보, 중도, 보수일 경우=1, 아닌 경우=0(터미)
	소득		만원 단위 물가반영 가구균등화소득
	사회신뢰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 매우 신뢰한다=4

2. 분석방법

분석은 기초통계를 통한 자료이해를 선행하며, 선형회귀분석과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Baron & Kenny(1986)는 조절효과의 확인을 위해 Cohen & Cohen(1983)의 위계적 선형회귀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법에 따라 먼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모형1), 독립변수와 상호작용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모형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작용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모형3)하고자 한다. 이하 서베이 자료의 분석에는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인구비례에 따른 설문응답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IV. 분석

1. 기술통계

표본응답자의 50.18%는 여성으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6.9세였다. 응답자의 91%는 고졸 이상이었으며, 대졸이상은 42%를 차지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49.93%로 나타났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한국의 수도권 거주인구 비중이 50%를 넘겨(통계청, 202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수가 유사한 규모가 된 것을 자료의 응답자 특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중 중도의 정치성향을 가졌다고 대답한 비중은 40%에 가까웠다. 2019년의 물가를 반영해 가구 소득에 대해 가구원수별로 균등화한 개인소득은 월 평균 27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 특성

n=6,997		빈도(명)	비중(%)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성별	여성	3,511	50.18	0.502	0.500	0	1
	남성	3,485	49.82	0.498	0.500	0	1
연령		6,997	100	46.970	14.395	19	89
학력	고졸미만	585	8.37	0.084	0.277	0	1
	고졸	2,613	37.35	0.374	0.484	0	1
	전문대졸	806	11.53	0.115	0.319	0	1
	대졸이상	2,991	42.75	0.427	0.495	0	1
지역	비수도권	3,503	50.07	0.501	0.500	0	1
	수도권	3,493	49.93	0.499	0.500	0	1
정치성향	진보	2,447	34.98	0.350	0.477	0	1
	중도	2,789	39.87	0.399	0.490	0	1
	보수	1,759	25.15	0.251	0.434	0	1
소득		6,997	100	2,708,948	976,129.4	256,882	1.05E+07

거주지역에 따른 응답자 평균에 대한 T-Test결과 연령, 교육, 소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평균 연령이 비수도권보다 0.9년 낮았으며, 교육수준과 소득 평균은 수도권에서 더 높았다. 특히 수도권의 월평균소득이 비수도권의 월평균소득보다 35만원 더 높게 나타나 지역별 소득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²⁾

2) 거주지역에 따른 T-Test H0: 비수도권(0) - 수도권(1)=0, *p<0.05

〈표 3〉 거주지역에 따른 응답자 특성 차이

T-Test (평균값)	성별	연령	교육	소득	사회신뢰
비수도권	0.501	46.771	2.817	2,539,233	2.706
수도권	0.494	45.862	2.995	2,893,512	2.713
T값	0.495	2.366*	-6.389*	-13.8916*	-0.550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불평등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불평등, 학력불평등, 성별불평등에 대한 응답은 평균에 대한 T-Test 결과 모두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거주보다 비수도권 거주 지역에서 각각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정부공정성 인식 평균은 5.52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공정성 인식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 각 변수 간 상관관계는 대체로 매우 높지 않지만, 소득과 학력불평등 인식간의 상관관계가 0.5보다 넘는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³⁾

〈표 4〉 정부공정성 인식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특성

		정부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소득	학력	성별
평균		5.520	5.555	5.347	4.696
표준편차		1.590	1.930	1.839	1.594
거주 지역	비수도권	5.535	5.621	5.455	4.838
	수도권	5.504	5.488	5.239	4.553
T값 ⁴⁾		1.161	2.5082*	4.4884*	8.237*

2. 회귀분석

정부공정성 지각에 개인특성 및 지역특성이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정부공정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정부공정성 인식에 지역특성이 조절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위계적 선행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3) 정부공정성 인식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 간 상관관계는 -0.19에서 -0.28 사이의 유의미한 값(p<0.05)들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과 학력불평등 인식 간 상관관계는 0.5981의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도출되었다.

4) 거주지역에 따른 T-Test H0: 비수도권(0) - 수도권(1)=0 , *p<0.05

1)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과의 관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 학력불평등, 성별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여, [가설1]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정부공정성 인식이 낮아졌으며, 여러 통제변수 중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정부공정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 정치성향과 사회신뢰에서 정부공정성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에 대해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정치성향이 진보일 때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보수일 때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부 집권당 성향과 자신의 정치성향이 일치할 경우 정부의 공정성에 높은 평가를 보였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분석이다(유승주 외, 2019). 마찬가지로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표 5〉 정부공정성 인식에 대한 OLS

정부공정성		Coef	Std.e
사회적 불평등	소득	-0.119***	(0.0108)
	학력	-0.0950***	(0.0115)
	성별	-0.0541***	(0.0113)
거주지역		-0.104**	(0.0340)
연령		0.0567	(0.0323)
성별(남=1, 여=0)		-0.0612	(0.0335)
교육		0.0239	(0.0195)
소득		1.98e-08	(1.83e-08)
정치성향	진보	0.285***	(0.0385)
	중도(ref.)	0	(.)
	보수	-0.248***	(0.0440)
사회신뢰		1.068***	(0.0329)
상수		3.898***	(0.158)
N		6997	
R-sq		0.246	
adj. R-sq		0.245	
F		207.5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2) 거주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공정성 관계에 대한 거주지역(수도권=1, 비수도권=0)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⁵⁾ 모형 추정결과 소득 및 성별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간의 사이에 거주지역이 조절 역할을 수행하여 [가설 2-1]과 [가설 2-2]를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득불평등과 정부공정성의 관계를 다룬 모형 1에서는 소득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공정성 인식이 낮아졌다. 모형 2에서 소득불평등 인식과 수도권거주는 모두 정부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하게 (-)의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모형 3에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 모형 1에서 모형 3까지 각 단계의 R²가 0.234에서 0.236으로 지속하여 상승하였으며, 이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검정통계량 F값을 도출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학력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의 관계에서는 수도권 거주 여부가 조절효과를 갖지 않았다. 조절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모형1, 모형2까지 학력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공정성인식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모형3에서 수도권 거주 여부와 정부공정성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성별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관계를 다룬 모형1에서 성별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공정성 인식이 낮아졌다. 모형2에서 성별불평등 인식과 수도권거주는 모두 정부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하게 (-)의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모형3에서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성별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을 때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낮아지는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모형 1의 R²는 0.202, 모형 2의 R²는 0.203, 모형 3의 R²는 0.205로 각 단계의 R²가 지속하여 상승하였으며, 이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검정통계량 F값을 도출해 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5) 지면의 한계로 응답자 특성을 통제한 결과는 본문에 표시하지 않았다.

〈표 6〉 정부공정성 인식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거주지역의 조절효과

정부공정성인식	(1)	(2)	(3)
소득불평등	-0.184*** (0.00873)	-0.185*** (0.00874)	-0.153*** (0.0121)
거주지역		-0.0765* (0.0341)	0.301** (0.102)
소득불평등×거주지역			-0.0678*** (0.0173)
상수	3.311*** (0.162)	3.320*** (0.162)	3.138*** (0.169)
N	6997	6997	6997
R2	0.234	0.235	0.236
AR2	0.233	0.234	0.235
F	267.09***	238.11***	216.28***
	(1)	(2)	(3)
학력불평등	-0.182*** (0.00922)	-0.184*** (0.00924)	-0.165*** (0.0124)
거주지역		-0.0937** (0.0343)	0.130 (0.104)
학력불평등×거주지역			-0.0418* (0.0183)
상수	3.235*** (0.163)	3.251*** (0.163)	3.140*** (0.170)
N	6997	6997	6997
R2	0.228	0.229	0.230
AR2	0.227	0.228	0.229
F	258.51***	230.83***	208.39***
	(1)	(2)	(3)
성별불평등	-0.131*** (0.0108)	-0.134*** (0.0109)	-0.184*** (0.0151)
거주지역		-0.0873* (0.0349)	-0.557*** (0.106)
성별불평등×거주지역			0.1000*** (0.0214)
상수	2.899*** (0.168)	2.920*** (0.168)	3.171*** (0.176)
N	6997	6997	6997
R2	0.202	0.203	0.205
AR2	0.201	0.202	0.204
F	221.36***	197.61***	180.5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3. 논의

분석을 통해 첫째,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득, 학력, 성별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출발선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기회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정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다(주병기, 2022).

둘째, 소득과 성별에 대한 불평등 인식은 비수도권 거주자가 높은 반면, 정부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수도권 거주자 대비 비수도권 거주자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도권 거주자의 정부공정성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영남과 호남 지역 청년층의 사회공정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이희정, 2018b)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지방정부의 분권 및 자치를 위한 활동이나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한 평가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교육기회의 공정성 인식이 높았으며, 주민과 국회의원간 소통이 강한 경우 정치활동, 취업기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높으며,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도입 등은 취업기회 및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이수, 2016). 이러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지역 거주자들의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제고하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체제정당화 이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현실을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재분배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김태심, 2020). 현재 놓여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 거주자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정부공정성 인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여겨지는 정부의 활동이 수도권 거주자들의 기대 대비 충분한 성과를 도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 복지예산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을지라도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 요인들의 성과가 적은 경우 기대불일치가 발생하여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일 수 있다(김이수, 2016). 자원이 많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그 자원들의 공정한 배분에 기여해야 할 정부가 충분히 역할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셋째, 소득과 성별에 대한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의 영향관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권 거주자보다 소득과 성별이 불평등하다는 인식

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소득활동의 기회나 좋은 직장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느끼며, 수도권에 교통이나 기본 생활시설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한국리서치, 2021). 실제로 수도권에 원천분배소득의 비중이 훨씬 높게 배치되어 있으며, 인구비중 대비 재산소득이나 영업잉여 등이 주로 수도권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어 수도권에 경제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권력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병유, 2016).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소득 격차 인식은 소속 집단 내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의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지역격차의 정도는 개별 지역의 주관적인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소진광, 2020)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에 따라 다른 불평등인식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방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서울이나 수도권과 비교하여 문화적으로 차별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별 성평등지수를 시도별로 나누어 보면 의사결정, 교육과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 비수도권 도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대비하여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이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성별에 대한 차별인식이 강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성별에 따른 성취도 능력 차이가 별로 없더라도, 아직까지도 거주 지역에 따라 성별 간 대학입학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실재한다.⁶⁾ 이런 현상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 지역 간 불균등한 교육기회와 성별에 따른 선택편향이 함께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추측해볼 때,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성별불평등 상황을 더 민감하게 정부불공정과 연관하여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학력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의 관계에서 지역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지역대학 대졸자의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 및 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문제, 수도권-지방소재 대학의 학벌구조에 의한 차별인식 등이 높은 현실임은 분명하다(정진상, 2004, 백종국, 2007, 문남철, 2010; 박우식 외, 2011; 정동일·박영민, 2021에서 재인용), 비수도권 지역은 청년층(대졸자) 인구의 역외 유출,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의 대량 유출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정동일·박영민, 2021)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⁶⁾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신의 성적보다 위세가 낮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자보다 그 외 도 지역 거주자의 경우 이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강충서·윤민중, 2020).

V. 함의 및 결론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사회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장상수 외, 2015). 특히 정부공정성은 정부 정책을 통해 정부가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정부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논의하는 것은 곧 공공정책의 불평등한 배분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공정성 개념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관계에 집중해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많은 연구가 주로 소득에 집중해 불평등을 논의했던 것을 대표적인 사회적 불평등이라 할 수 있는 소득, 학력, 성별 불평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불평등 인식의 여러 차원을 고려하였다. 또한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이 거주 지역별로 다름을 통해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가 정부활동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환기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불평등, 학력 불평등, 성별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으며, 특히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정부공정성 인식이 낮아졌다. 그리고 소득 및 성별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간의 사이에 거주 지역이 조절 역할을 수행하여 거주 지역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사회적 불평등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차원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별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추상적 논의를 넘어 정부공정성에 대한 실제적 논의를 활발히 하고 다양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정부공정성 인식에 대한 거시적 접근으로 기존 질문을 활용하였으나, 정부공정성 인식에 대한 분배적, 절차적 공정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이 역의 인과성을 가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패널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비롯하여 집단 성향별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공정성 인식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확인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우진. (2017). 한국 민주주의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지지. 『한국과 국제정치』, 33(3): 33-60.
- 강충서·윤민중. (2020). 성(性) 과 지역에 따른 대학교육 기회의 불평등: 언더매칭 (undermatching) 현상을 통한 설명. 『교육혁신연구』, 30(1): 47-7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서울: 한국경제신문.
-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김명언. (2005). “정부정책의 공정성”. 석현호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병관. (2011). 한국사회의 공정성 문제 원인과 과제. 『지식의 지평』, (11): 194-216.
- 김병규·이곤수. (2013). 대통령신뢰와 행정부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541-566.
- 김상돈. (2009).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이 국가기관 불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3(2): 25-54.
- 김세원·박길성·이승훈·이우진·김주성·정용덕·오병선·안상훈·허병기·김태기·윤영철. (2011). 「페어 소사이어티: 기회가 균등한 사회」. 한국경제신문.
- 김세훈, 서순복. (2012). 문화예술 공공지원정책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55-76.
- 김은희·박희서. (2007).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공정성 지각이 친정부적 자발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1(4): 261-285.
- 김이수. (2016).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20(2): 123-152.
- 김종일. (2010). 한국의 지역 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응용경제』, 12(1): 181-201.
- 김태심. (2020).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28(1): 129-167.
- 김호균. (2007). 조직공정성 인식,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간 영향관계분석. 『한국행정학보』, 41(2): 69-94.
- 김호균·김정인. (2013). 미국 NPO 조직에서의 조직공정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간 관계고찰: 교차수준 분석(cross-level study)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2): 161-187.
- 박종민·배정현. (2007). 정부신뢰와 정책혜택 및 정부공정성에 대한 태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 발표논문집』, 1-17.
- 박종민·배정현. (2009). 양성평등의 기준: 통치제도와 문화편향의 차이. 『정부학연구』, 15(3): 7-27.

- 박종민·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2.
- 박준식·김영범. (2012). 지역격차 수준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수도권·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85: 264-293.
- 박진아. (2020).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 박철민·김대원. (2003). 조직공정성이 상관신뢰와 공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37(4): 125-145.
- 박현주. (2016). 개인특성과 지역특성이 정부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6(2): 247-273.
- 박효민·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 이론」, 27: 219-260.
- 박희봉·이영란. (2012). 시민문화와 정부정책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4(4): 913-936.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7.
- 배귀희. (2007).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조직신뢰와 조직몰입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9(3): 473-500.
- 서정욱·김동욱·김주경. (2021).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3): 253-282.
- 석현호 편. (200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의식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소진광. (2020).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1): 3-48.
-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신광영. (2004). 계급, 성과 일자리 이동. 「한국사회학」, 38(1): 25-50.
- 신상준·이숙중. (201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2): 1-37.
- 엄석진·윤영근. (2012).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4): 245-265.
- 우명숙·남은영. (2021).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1): 201-244.
- 유두호·엄영호·윤선일. (2021). 정부의 공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부혁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4): 297-319.
- 유승주·엄영호·장용석. (2019). SNS 활동이 정부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3(2): 40-63.
- 윤건·서정욱. (2016). 사회통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3(3): 21-44.

- 윤민재·임정재. (2022). 한국사회의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연령대별·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2(1): 40-80.
- 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이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27-51.
- 이윤경. (2014). 국민 가치관이 정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rid Group 문화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1): 119-154.
- 이중수. (2011). 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25(1): 15-34.
- 이지호·이현우. (2015). 정부신뢰의 한국적 의미와 측정: 반응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한국정치연구」, 24(3): 1-26.
- 이창원·조문석. (2016). 정부성과, 정치이념, 사회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2(4): 153-181.
- 이현. (2021).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과 능력주의 그리고 불평등 문제. 「교육비평」, (48): 298-337.
- 이희정. (2018a). 공정성 원칙을 둘러싼 갈등과 변화. 「문화와 사회」, 26(2): 7-60.
- 이희정. (2018b).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 장상수·김상욱·신승배. (2015).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인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전병유. (2016). 「한국의 불평등」. 서울: 페이퍼로드.
- 정광호·이달곤·하혜수. (2011).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45(4): 181-202.
- 정동일·박영민. (2021). 대졸자 지역이동의 구조: 연고, 기회, 거리의 상호작용. 「지역사회학」, 22(1): 5-40.
- 정준호. (2009). 산업특화가 지역경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494-506.
- 조권중·최지원. (2020). 「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서울연구원.
- 조명래. (2011).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복지동향」, (157): 4-9.
- 주병기. (2022). 공공성의 경제학과 한국경제.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197-235.
- 최낙범·엄석진. (2013).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찰조직에서의 상호작용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3): 181-212.
- 통계청. (2020).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한국리서치. (2021). 기획: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 136(2): 1-1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황선재·계봉오.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사례와 함의. 「한국인구학」, 41(4): 65-8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ickman, P., Folger, R. & Goodeetal, E. (1981). *Microjustice and Macrojustice*. 173–202. in Melvin J. Lerner & Sally C. Lerner (eds.). Press.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Erlbaum.
- Hegtvedt, K. A. (1993). Approaching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Are separate routes necessary. *Advances in group processes*, 10: 195–221.
- Hegtvedt, Karen A. & Johnson, Cathryn. (2000), Justice beyond the individual: A future with legitimation Future with Legitim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3(4): 298–311.
- Hetherington, M. J., & Husser, J. A. (2012). How trust matters: The changing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2): 312–325.
- Homans, G. C.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Lind, E. A., & Tyler, X. 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ew York: Plenum Press.
- Tyler, T. R., Rasinski, K. A., & McGraw, K. M. (1985). The influence of perceived injustice on the endorsement of political leader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8): 700–725.
- Tyler, T. R. (2010), *Why People Cooperate: The Role of Social Motiv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김 상 숙: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어떤 ‘다름’이 ‘차이’를 가져오는가? 공기업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2019)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행태, 인적자원관리, 다양성 등이며, “양성 평등 균형인사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공공봉사동기(PSM)에 미치는 영향”(2020), “공기업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 감수성(Diversity Sensitivity)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2021), “국회 여성 보좌진의 조직경험과 반응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2022) 등의 논문을 썼다. (sangsuk_kim@kipa.re.kr)

나 보 리: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지역문화재단의 동형화와 책임성에 대한 연구, 2022)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보지식정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 문화정책, 지역이며, “지역문화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관계적 지역문화자원의 역할”(2022), “발레공연의 만족과 충성도 연구”(2022), “가족여가의 시간제약과 여가비 지출간의 관계”(2021) 등을 썼다. (ellenq@naver.com)

